

2019 시리즈



기마켓

사회

바다사자 지음



저자의 말

2021학년도 저자의 말

신입 저자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신 오르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따라와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

앞으로 2021학년도에도 열심히하는 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작년에 느꼈던 여러 부족한 부분을 모두 개선하고,

제 모든 능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나은 교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마켓입니다. 독해력 증진에만 힘썬던 기존의 비문학 교재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입니다. 짧은 배경지식에 기출만 나열한 간단한 형태이지만, 기마켓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한합니다.

1. 비문학 기출 지문을 활용한 독해력 증진
2. 제재별로 분류된 지문을 활용한 취약부분 배경지식 학습
3. 쉽게 접하지 못했던 수능 지문을 활용한 새로운 지문 독해 학습
4.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비문학 지문 백과사전

정형화된 활용 방법은 없습니다. 개개인이 필요한 부분을 학습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 교재는 문제가 없는, 비문학 지문만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지문을 독해하는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포 방지를 위해 지문 제목은 지문 번호로 대체하였고, 지문의 마지막에 주제와 핵심 내용을 직접 쓰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신, 키워드는 맨 앞 지문 목록에 넣었습니다.



법	10 p
경제	19 p
평가원 지문으로 복습	33 p

지문번호	출처	키워드	페이지
법			
1	2016. 06월 A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34 p
2	2020. 09월	소유권	36 p
3	2017. 09월	사단법인	38 p
4	2015. 09월 A형	자연법 사상	40 p
5	2014. 09월 AB형	공동 소송	42 p
6	2019. 수능	계약 조건	44 p
7	2016. 수능 AB형	EP딜레마	46 p
8	2019. 06월	계약과 의무	48 p
9	2014. 06월 B형	입증 의무	50 p
10	2014. 06월 A형	저작권법	52 p
11	2013. 06월	헌법	54 p
12	2005. 09월	초상권	56 p
13	2010. 06월	명예훼손	58 p

경제

14	2019. 09월	CDS프리미엄	60 p
15	2016. 09월 A형	정책의 효율	62 p
16	2012. 09월	효율을 고려한 정책 성립 과정	64 p
17	2011. 09월	환율	66 p
18	2010. 09월	지리와 경제학	68 p
19	2020. 수능	BIS비율	70 p
20	2014. 수능 AB형	광고	72 p
21	2020. 06월	통화정책	74 p
22	2018. 06월	통화정책	76 p
23	2015. 06월 B형	광고에 대한 책임	78 p
24	2015. 06월 A형	기업이 주는 보상	80 p
25	2008. 06월	외부성	82 p
26	2013. 수능	연금제도	84 p
27	2012. 수능	외부성	86 p
28	2011. 수능	채권	88 p
29	1994. 수능 1차	자본주의 기업	90 p
30	1994. 수능 2차	합리적 사람	92 p
31	2005. 예비	소비의 특징	94 p
32	2006. 09월	행동경제학	96 p
33	2008. 09월	마이크로크레디트	98 p
34	2009. 06월	조세전가	100 p
35	2006. 수능	옵션	102 p
36	2008. 수능	공공사업	104 p
37	2010. 수능	기업 결합	106 p
38	2011. 06월	광고 효과	108 p
39	2017. 수능	보험의 원리	110 p
40	2018. 수능	정책 수단	112 p

정치/사회현상

41	2018. 09월	집합의례	114 p
42	2015. 09월 B형	주민 참여 제도	116 p
43	2016. 06월 B형	산업화	118 p
44	2015. 수능 B형	시민사회	120 p
45	2015. 수능 A형	공공서비스	122 p
46	2014. 06월 B형	수정주의	124 p
47	2012. 06월	혁신의 확산	126 p
48	2009. 06월	현대 사회의 연민	128 p
49	2007. 수능	제 3자 효과	130 p
50	1994. 수능 1차	복지국가론자	132 p
51	1995. 수능	인권선언문과 성평등권	134 p
52	1996. 수능	사회 문제의 규정	136 p
53	1997. 수능	사회 복지	138 p
54	1998. 수능	사회 구조론	140 p
55	1999. 수능	세계화	142 p
56	2000. 수능	여러 사회의 식량 배분	144 p
57	2003. 예비	법정 노동 시간	146 p
58	2007. 09월	후 채택 이론	148 p
59	2009. 09월	영웅의 형성	150 p
60	2009. 09월	선거의 특이한 양상	152 p
61	2001. 수능	상호주의	154 p
62	2009. 수능	도시의 여러 계층	156 p
63	2005. 06월	다이어트	158 p
64	2006. 06월	청소년 문화	160 p
65	2006. 06월	양성간 차이	162 p
66	2013. 09월	고대 사회의 소비	164 p
67	1995. 수능	목의 개념	166 p

문화/역사

68	2015. 06월 A형	연대 측정	168 p
69	2010. 06월	조총	170 p
70	2005. 06월	노래방문화	172 p
71	1994. 수능 1차	외래 문화	174 p
72	1994. 수능 2차	역사주의	176 p
73	1994. 수능 2차	현대인의 미래 전망	178 p
74	1997. 수능	사상	180 p
75	2004. 09월	유럽에 대한 개념	182 p
76	2006. 09월	규장각	184 p
77	2007. 09월	임진왜란	186 p
78	2001. 수능	혼합 문화	188 p
79	2004. 수능	타 문화의 도입	190 p
80	2011. 수능	정나라	192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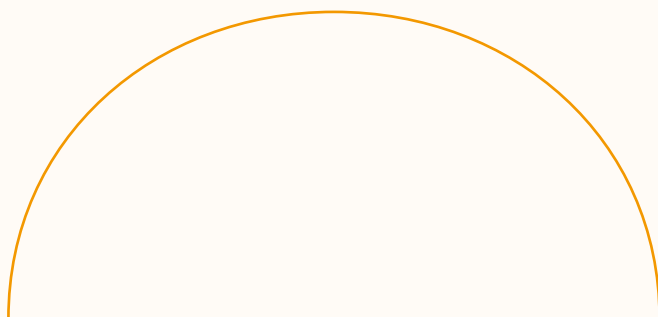
기타 사회

81	1994. 수능 2차	사회 조직의 상호작용	194 p
82	1994. 수능 1차	붕당	196 p
83	1995. 수능	사회 과학	198 p
84	1997. 수능	명분관	200 p
85	2002. 수능	자본주의 경제 체제	202 p
86	2005. 수능	선거 이론들	204 p
87	2004. 06월	자유주의	206 p
88	2004. 06월	공손한 상황	208 p
89	2006. 06월	공론장	210 p
90	2007. 06월	쇼윈도	212 p
91	2016. 수능 B형	암묵지 개념	214 p

2017 시리즈



기마켓



사회의 기본 내용들





법

법은 우리 주변에 있다. 법을 객관적으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사회와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사회 전체의 질서를 지켜야 해서 지금까지 많은 양의 법이 생겨났다. 본 교재에서는 법의 기본 특징들을 설명한 후,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의 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능 국어에 도움이 되는 배경지식을 쌓을 것이다. 추가로, 평가원에서 다뤘던 조선시대의 법과 해외의 특이한 법을 다룸으로써 수능국어에서 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역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1 법의 의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법을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객관적인 의미는 그러하지만, 법은 개개인에게 다르게 와닿을 것이다. 누군가에겐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보일 거지만, 누군가에겐 자신을 억압하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체제에서는 법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법은 사회 규범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따르고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과 기본 질서이다.

법은 강제 규범이다.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력이 있다는 것에서 도덕 규범과 종교 규범과 구별된다.

법은 국가 규범이다. -법은 국가공동체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즉, 법은 항상 따뜻하지 않다는 것이다. 뻔한 일화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렸더니 갈비뼈 골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화는 누구나 알 것이다. 이처럼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규범과는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사회 규범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관습, 도덕, 법이다. 이 중 강제성을 갖고 있는 규범은 법이 유일하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해도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법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반면 관습은 강제적이지 않다.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관습과 법은 매우 지역적인 반면, 도덕은 세계적으로 비슷하다는 차이도 있다. 앞으로 사회 규범을 법과 구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가 법에 포함되는지, 법을 대략적으로 공부하며 알아두면 일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법의 구분

법을 떠올려보자. 뉴스를 보면 대통령 시행령도 있고,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는 등 법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법원의 판례에서 나온 판례법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법을 간략하게 구분해 보자.

1) 형성 과정

자연법	실정법
자연적 질서 등으로 인해 형성된 법으로,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존재한다.	특정 사회에서 사회적 풍조에 부합하도록 제정한 법이다. 주로 자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시대와 지역, 문화에 따라 다르다.

2) 존재 형식

성문법	불문법
국가 기관에 의해 일정한 절차와 양식에 맞는 문서로 제정된 법.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을 우선 적용한다.	문서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법. 관습과 판례 등이 불문법에 해당한다.

3) 법의 제정 주체와 효력 범위 국가

국내법	국제법
한 나라 안에서 효력을 미치는 법	국제 조직 등 국가 밖에서 효력을 미치는 법

4) 법의 규율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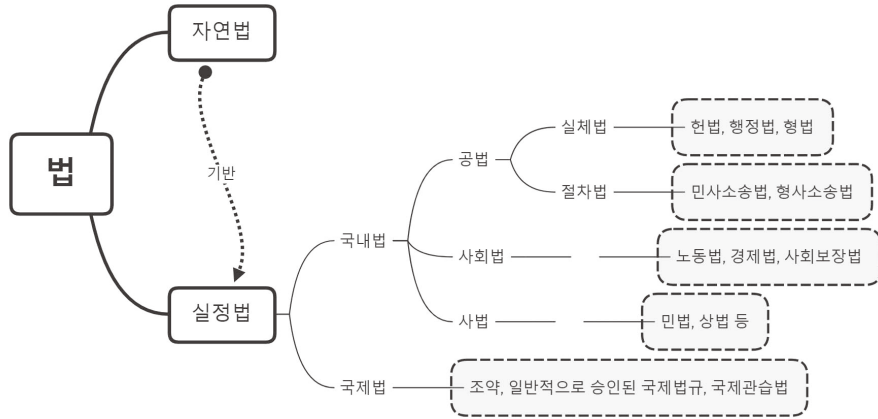
공법	사법	사회법
국가의 조직과 기능, 공익을 규율하는 법으로, 헌법, 행정법 등이 포함된다.	개인 상호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민법과 상법이 포함된다.	자본주의 등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한 법이다. 노동법, 경제법 등이 포함된다.

5) 규율 내용

실체법	절차법
권리와 의무 그 자체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 형법, 민법 등	실체법에 규정된 권리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

6)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일반법	특별법
두루 적용되는 법	특별한 장소, 사람, 사물 등에만 적용되는 법



#3 법의 해석

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게 되어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자. 일상에서는 자전거가 피해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급으로 분류된다. 다만, 과실의 정도를 산정할 때에는 차등분배하는 방법으로 '상식'을 어느정도 반영한다. 위에서 다룬 법 중에 실정법이 있을 것이다. 법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그런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과정이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종종 여러 논란을 낳는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랑 적용시키는 사람이 나뉘어 있으므로, 입법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문을 어떻게, 어떤 범위로 해석해야 하는지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법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가기관이 해석하는 유권 해석과 법학자가 학문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학리 해석으로 나뉜다.

우선, 유권 해석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법원이 행하는 사법 해석이다. 사법기관은 법원만이 아니라 판사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권 해석은 삼권 분립에 맞게 사법 해석뿐 아니라 입법 해석도 있고, 행정 해석도 있다. 법원에도 단계가 있듯이 사법 해석 역시 단계가 있으며, 대법원의 사법 해석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다. 사법 해석의 경우, 판례라는 형태로 남아있으며, 판례법이라는 개념이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효력을 갖고 있다. 법의 해석이라고 해서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특정 법률에 의거해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경찰은 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해석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학리 해석이 있다. 단순히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행하는 해석으로, 논리해석과 문리해석으로 나뉜다. 논리 해석은 논리구조를 분석하는 것이고, 문리 해석은 조문의 글자나 구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제

정리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정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株式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

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주제

정리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때와 장소에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통적으로 이런 법을 ‘자연법’이라 부르며 논의해 왔다. 자연법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둔다. 특히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성, 다시 말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은 자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서구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라고 이해하여 종교적 권위를 중시하였다. 이후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서는 신학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연법을 오직 이성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경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1583~1645)는 중세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인간 이성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 그는 이성을 통해 확인되고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법 규범은 자연법이자 신의 의지라고 말하면서, 이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의 올바른 인도를 통해 다다르게 되는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보았다.

그로티우스가 활약하던 시기는 한편으로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 그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법도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자연법에 기반을 두면 가톨릭, 개신교, 비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이렇게 이루어진 법 원칙으로써 각국의 이해를 조절하여 전쟁의 참화를 막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1625년 『전쟁과 평화의 법』이란 저서를 낳았다. 이 책에서는 개전의 요건, 전쟁 중에 지켜져야 할 행위 등을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 때문에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신의 권위에서 독립한 이성의 법에는 인간의 권리가 그 핵심에 자리 잡았고, 이는 근대 사회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한 예로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에도 자연법의 영향이 나타난다. 더욱이 프랑스 대혁명기의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을 불가침의 자연법적 권리로 선포하였다. 이처럼 자연법 사상은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특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자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은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비판의 선봉에 서며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이른바 ‘법률실증주의’이다. 법률실증주의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

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되며, 또한 그것은 국가 권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로 말미암은 참혹한 세계 대전을 겪게 되자, 자연법에 대한 논의는 부흥기를 맞기도 하였다. 오늘날 자연법은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여전히 의의가 인정된다.

주제

정리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정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

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주제

정리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때와 장소에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통적으로 이런 법을 ‘자연법’이라 부르며 논의해 왔다. 자연법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둔다. 특히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성, 다시 말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은 자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서구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라고 이해하여 종교적 권위를 중시하였다. 이후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서는 신학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연법을 오직 이성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경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1583~1645)는 중세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인간 이성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 그는 이성을 통해 확인되고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법 규범은 자연법이자 신의 의지라고 말하면서, 이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의 올바른 인도를 통해 다다르게 되는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보았다.

그로티우스가 활약하던 시기는 한편으로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 그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법도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자연법에 기반을 두면 가톨릭, 개신교, 비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이렇게 이루어진 법 원칙으로써 각국의 이해를 조절하여 전쟁의 참화를 막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1625년 『전쟁과 평화의 법』이란 저서를 낳았다. 이 책에서는 개전의 요건, 전쟁 중에 지켜져야 할 행위 등을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 때문에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신의 권위에서 독립한 이성의 법에는 인간의 권리가 그 핵심에 자리 잡았고, 이는 근대 사회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한 예로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에도 자연법의 영향이 나타난다. 더욱이 프랑스 대혁명기의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을 불가침의 자연법적 권리로 선포하였다. 이처럼 자연법 사상은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특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자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은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비판의 선봉에 서며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이른바 ‘법률실증주의’이다. 법률실증주의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

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되며, 또한 그것은 국가 권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로 말미암은 참혹한 세계 대전을 겪게 되자, 자연법에 대한 논의는 부흥기를 맞기도 하였다. 오늘날 자연법은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여전히 의의가 인정된다.

주제

정리